



## 建設部 人事이동

### 住宅·土地局長등 변경

정부는 구랍 30일 건설부를 비롯한 4개 부처의 일부 과장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 가운데 건설부의 인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국장=金漢鍾(토지구장) △토지구장=崔錫潤(감사관) △감사관=徐柄基(본부근무) △국립건설연구소 건축부장=金永哲(본부근무) △국립건설연구소 훈련부장=李富植(본부근무) △본부근무=金報根(주택국장) △본부근무=鄭淳虎(국립건설연구소 훈련부장) ( ) 안은 전임보직임.

## 施工감리 業体에 맡기기로

### 서울市, 감독관제로

서울시는 시가 발주하는 공사장에 시 공무원을 고정배치해 감독케하는 현재의 고정감독관 공사감리체제를 앞으로는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용역단체등에 맡기는 감독관제로 바꾸기로 했다.

이는 공사현장감독을 맡으면서 빚어지는 부조리요인을 없애고 설계 및 시공에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취해진 것이다.

시는 우선 내년초에 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 서울대공원, 한강종합개발과 금호대교, 동작대교 건설공사에 이러한 감리체제를 채택하기로 했다.

## 대도시 주차장 크게 확대

### 2 백평미만 申告制로 검토

정부는 서울 釜山 大邱등 대도시의 駐車場難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申告주차장제를 실시, 도시계획 시설허가를 받지 않아도 주차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공용주차장 설치기금도 조성, 공용주차장 건설을 대폭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관계당국이 추진중인 주차장법개정안에 의하면 대도시의 유흥지중 6백평방미터(약 2백평 미만)의 땅에 대해서는 주차장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설치허가를 받지 않아도 토지소유주가 시·도에 신고만하면 주차장을 개설, 규정된 요금을 받을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을 설치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등 복잡한 행정절차때문에 토지소유자들이 주차장설치를 기피하는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 토지소유자들은 주차장 설치때뿐만 아니라 폐쇄시에도 신고만 하면 되기때문에 유흥토지의 주차장 이용을 효과적으로 할수 있게 된다. 신고 주차장제는 일부 대도시에서 행정조치로 이미 실시하고 있으나 정부가 이 제도를 법제화함으로써 모든 대도시에서 이 제도의 실시가 가능하게 된다.

정부는 또 대도시의 공용 주차장설치가 극히 부진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주차장(路上 및 路外주차장)에서 징수된 요금 ▲도로교통법상 주차위반으로 징수된 벌금 ▲상업용건축물중 자체주차장시설이 어려운 경우 시·도에 기탁하는 기탁금 등으로 공공주차장설치 기금을 마련, 공용주차장시설을 늘려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주차장설치 기금마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공공주차장에서 징수되는 요금도 교통안전시설등 목적이외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현행주차장법을 개정, 주차장 설치목적외에는 기금을 쓸 수 없도록 제한규정을 두기로 했다.

또 도로교통법상 주차위반으로 징수된 벌금도 주차장 설치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건평 1백5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상업용 건물의 경우 주차장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현행규정도 개정, 현실적으로 주차장설치가 불가능한 건물에 대해서는 주차장설치비용을 시·도에 기탁하면 자체주차장은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할 예정이다. 밀집된 상업지역내 건물의 경우 자체주차장 설치비용보다 진입도로등

부대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체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시·도는 기탁된 기금으로 상업지역내 인근에 공용주차장을 설치,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정부는 관계부처협의를 거쳐 내년 2월까지 주차장법 개정안을 확정, 내년 3월 임시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 집단 宅地用대지 부족현상 企劃院, 裸垆地이용 촉진 지적

전국의 주요도시에 집단宅地로 개발 가능한 면적이 극히 제한되어 있어, 소규모裸垆地의 이용을 촉진하고 토지를 高密度로 이용하는 등의 토지정책이 요청되고 있다.

경제기획원은 지난해 경계를 회고한 白書에서 우리나라 40개주요도시의 주거지역중에서 3천평이상의 집단宅地로 개발이 가능한 면적은 불과 5천5백만평에 지나지 않아 대단위집단택지의 마련이 어렵다고 지적, 특히 대도시의 경우 도심재개발을 비롯, 소규모裸垆地의 이용촉진대책등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기획원은 우리나라의 도시계획구역상 주거면적은 1천3백69.9평방 km로서 총 국토면적의 1.4%에 불과하며, 도시계획구역중에서도 10.8%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히고 지속적인 인구증가에 대비한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택지확보와 地價안정대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원은 또 현행 주택정책을 크게 개선, 전세금융자제도등을 만들어 저소득계층에 대한 지원체제를 확립하고 長期주택자금상환의 경우 물가상승에 따른 초기의 과중한 부담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하자고 제의했다.

아울러 양도소득세의 개선을 통해 개발이익을 흡수하는 동시에 土地보상제도를 연계시키고, 지방세는 현행 去來稅중심에서 保有稅위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정책대안도 제시했다.

기획원은 건설업및 건축규제행정도 개선, 시장경쟁의 기능을 제약하는 건설업면허제도를 재검토해야하며, 토지이용 및 건축규제는 경제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漢江하류 宅地로 轉用 검토

### 오염 農地 경작 못하게

서울시는 내년중 한강하류 농경지에 대한 토양오염도 조사를 실시, 심하게 오염돼 경작에 부적합한 토지는 농작물재배 금지구역으로 고시하기로 했다.

시는 하류 농경지 22개지점(1만4천평)에 대한 조사결과 농작물재배 금지구역으로 지정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택지로 용도변경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내년중 강서구 공항동 방화동등 한강하류 22개 지점에 대한 종합적인 토양오염의 방지를 위해 중량천 안양천변의 중금속 배출업소 1천3백7개소를 상대로 산업폐기물 특별단속도 퍼나가기로 했다. 토양오염실태조사는 81년이후 2년만에 실시되는 것으로 한강변 경부 경인고속도로변등이 비소 구리 카드뮴 수은등의 중금속으로 오염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취해진 것이다.

## 獨立紀念館 전시관 細分

### 전통문화·日本침략등 15개로

독립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위원장 안봉생)는 「기본계획 성안을 위한 기본지침」과 「기본계획 성안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발표된 기본계획지침에 따르면 독립기념관 건립대지는 크게 進入부분, 상징조형물 및 기념광장, 전시관, 연구시설, 공원, 교육시설, 위락시설로 나누기로 했다.

진입부분에는 독립기념관 진입을 상징하는 大門을 둘 수 있도록 했으며 상징조형물의 경우는 전시기능이 없는 순수한 상징조형물이나 전시기능을 갖는 시설을 함께 구상하여 선택적으로 시공할수 있게 했다.

展示館은 민족전통문화, 민족근대문화, 日帝침략, 근대민족운동, 義兵, 救國계몽운동, 3·1운동, 임시정부, 독립군, 義烈鬪爭, 사회운동, 학생운동, 문화운동, 光復軍, 在外同胞등 15개로 구분하고 常設과 기획전시관 및 회의장, 공연장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기로 했다.

연구시설로는 연구소와 도서관 자료

관등을 세우기로 했으며 공원은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존하는 한편으로 특유식물과 특유동물의 방목이나 사육시설도 갖추도록 했다. 교육시설에는 야영기본시설, 수련합숙시설, 식당, 공연장 및 왁스뮤지엄등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시설들이 포함되도록 했다.

한편 「기본계획成案계획」에 의하면 독립기념관의 기본계획(마스터플랜)은 독립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 기획위원(38명) 중에서 종합계획분과위원회가 추천한 건축가 3인, 造景전문가 1인, 지역개발전문가 1인으로 구성되는 기본계획소위원회에서 말아 83년3월까지 成案하기로 했다.

## 特定지역지정 開發키로

### 다도해·지리산·덕유산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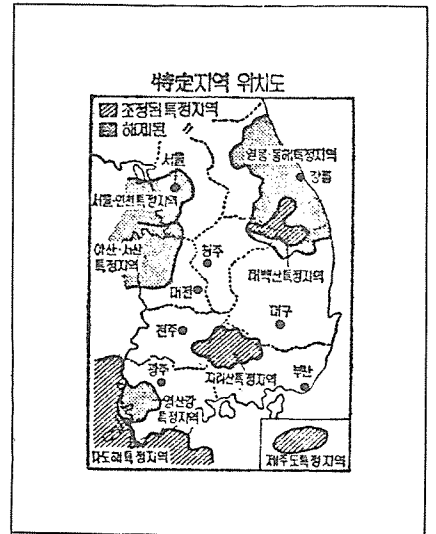
정부는 多島海 지역, 智異山 및 德裕山 일대를 特定지역으로 지정, 본격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건설부에 의하면 정부는 國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 심의 및 국무회의의결을 거쳐 현행 6개특정지역중 ▲서울-인천(3천3백25평방km), 牙山-瑞山(3천9백14평방km), 榮山江 지역(2천3백22평방km) 등 3개지역(榮山江 지역중 해안지역 일부 존속)을 폐지하고 ▲太白山 지역은 종전 8천3백67평방km에서 2천9백13평방km로 축소조정하며 ▲제주도 지역(1천8백25평방km)은 존속시키되 多島海 지역(2천2백37평방km 榮山江 지역중 해안지역흡수)과 智異山-德裕山 지역(2천3백37평방km)을 새로운 특정지역으로 확정, 고시했다.

이에따라 특정지역은 6개지역에서 4개지역으로 축소됐는데, 特定지역으로 지정되면 지방사업이라도 국고에서 재정을 지원, 종합개발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대신 특정지역안에서는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는 제한을 받게 된다.

정부는 4개특정지역중 다도해지역과 덕유산-지리산지역을 우선 개발키로 하고 내년중에 1억5천만원을 들여 이지역에 대한 개발기본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多島海 지역의 경우, 落島종합개발계획 방향에 따라 대규모 관광



단지 선착장 집하장 냉동시설등 수산관계시설, 토산품단지등을 우선적으로 조성하고 덕유산-지리산지역에 대해서는 관광 및 토산품단지를 마련하며 취락정비교통망 원비에도 중점을 두기로 했다. 건설부는 이지역에 대한 본격적인 개발을 오는 85년부터 착수할 방침이다.

## 서울등 건물課標 8%인상

### 올부터 13개 市·道등

내무부는 서울시를 포함한 전국 13개 시·도의 건물과세 시가표준액을 내년부터 8%인상토록 지시했다.

건물과표는 신축건물의 기준가격과 당해 건물의 경과년수등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번 과표인상조치로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신축건물의 경우 1평방m당 기준가격이 7만7천7백42원에서 8만4천원으로 올랐다.

내무부는 현행 건물과표는 실제 건축비에 비해 50%가량 낮게 책정돼 있어 점진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내년도는 경제안정과 국민세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그동안의 건축비 상승요인과 주택가격인상요인만을 반영, 조정폭을 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상된 건물과표는 취득세 등록세등에도 매매가격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그대로 적용돼 이들 지방세도 따라서 오르게 된다.

내무부는 지난 1월부터 건물과표를 9.8% 인상, 50억원의 지방세수가 늘어났었다.